

## 관세 협상 타결, 한미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는 변환점

EY한영 산업연구원  
October 2025  
#25-063

### Introduction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자국 산업 보호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역장벽을 재정비하며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교역 환경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작년까지 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사실상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통상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새 정부 집권 이후 관세를 필두로 한 자국 보호주의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향후 양국 통상 관계의 구조적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조정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중 이 중 2,000억 달러(현금 2,000억<sup>1</sup> + 조선탁력 1,500억)를 직접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자국의 산업 보호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망 재편 및 동맹국 간 산업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협의의 장으로 이번 협상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고, 일본-중국-대만 등 주요 경쟁국의 대응 동향에 대한 비교와 함께, 향후 협상 이행 단계에 대한 전망과 국내 산업별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전략산업 중심의 경쟁력 강화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간 한도 200억 달러로 제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



# 1. 관세 타결의 의미

## 한미 통상협상 타결: 주요 내용과 의미

이번 협상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 리스크의 부분적 완화.**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의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라는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자동차부품 등 주요 제조업 품목의 관세 인상 논의가 사실상 보류되고, 현행 세율이 유지됨에 따라, 당초 거론되던 25% 수준의 인상 가능성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세율 인하보다는 인상 억제에 성격이 강한 합의로 평가된다.

**둘째, 통상 협상을 통한 안보 협력 확보.**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배터리 등 전략산업 관세 조정과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제시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도입 및 관련 기술 협력 검토라는 안보 분야의 실질적 보장을 이끌어냈다. 즉, 경제적 양보 대가로 안보 기술 협력의 문이 열린 셈이다.


**셋째, 산업 정책과 통상 정책 간 연계 강화.**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조정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 투자 확대 논의 등 산업정책적 요소가 통상 정책 협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되었다. 이는 관세 문제를 산업협력과 연계해 다루려는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공급망 안정화 및 전략산업 분야에서 제도적 협력 기반이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번 타결이 모든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정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고, 주요 제조업 품목 중심으로 우선 협상 타결된 상태이다. 반도체, 철강, 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세부 협의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들 산업 특성상 보조금·위생검역(SPS)·기술규제(TBT) 등 여러 비관세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세부 이행 사항이나 품목별 적용 시점, 향후 미국 산업보조금 정책 변화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한미 FTA로 기존 무관세였던 품목들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율이 새롭게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업계 일각에서는 '1차 합의는 타결되었지만, 2차·3차 협상 라운드에서 조정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이번 합의를 단순히 '관세 리스크 종료'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향후 미국의 정책 전환, 경쟁국의 대응 움직임 그리고 타결되지 않은 산업 분야에 대한 후속 협상 결과를 함께 모니터링해야 한다. 동시에 공급망 구조를 고도화하고 대미 수출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전반을 재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향후 주요 절차

2025년 10월 29일 한미 관세정책 합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큰 틀을 정한 시점이며, 이후 합의문에 대한 법적 구속력 확보 절차, 일부 관세율이 확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후속 협상 및 대미 투자 관점에서 이행 메커니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 1) 한미 합의문(MOU) 서명 및 법적 구속력 확보

한미 양측은 아직 관세협약안 및 한미 투자기금의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공식 양해각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개 후에 세부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이후 이를 공식화하기 위한 시행 법령 또는 행정명령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에서는 11월 중순 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 예정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관세 인하 시점은 11월 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 일부 품목에 대한 후속 협상

금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는 반도체와 민감 품목(농산물, 쌀, 쇠고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 및 세부조건 등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해당 품목 모두 국가 핵심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어, 타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반도체의 경우 아직 끝나지 않은 미국-대만 협상 결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 분야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미국의 검역 완화나 수입 절차 간소화 등의 요구 대응과 국내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율 협상이 필요하다.

### 3) 대미 투자 이행

미국 내 전략산업에 대한 현금투자 2,000억원 및 조선업 협력 투자 1,500억원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위원회(美)/협의회위원회(韓)가 설립되어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내에서는 투자 펀드 운용 주체 선정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동시에, 국내 기업과 금융 기관은 해당 타임라인에 맞춰 자금조달 계획 및 투자 리스크 평가 및 미국 법인 설립 등이 예상된다.

### 4) 투자 이후 감시 및 분쟁해결체계 구축





금번 대미 투자는 국내 기업 관점에서 미국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이지만, 그만큼 미국 현지조건(공장설립, 현지고용, 노사관리, 규제준수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다. 또한, 현지 진출한 국내 기업이 미국 기업 대비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리스크도 있다. 따라서, 상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미 간 상호검토체계 확보 및 분쟁해결메커니즘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

### 3. 주요 경쟁국과의 비교 및 산업 영향

주요 품목별 대비 관세율 비교 ('25.10.30 기준)

트럼프 2기 이전

트럼프 2기 이후

								
반도체	0%	TBD <sup>1</sup>	0%	15%	50%	TBD	0%	TBD
자동차·부품	0%	15%	2%	15%	25%	TBD	3% <sup>4</sup>	20%
방산·조선	0%	0% <sup>2</sup>	0%	0% <sup>2</sup>	25%	TBD	0%	0% <sup>2</sup>
바이오	0%	0~15% <sup>3</sup>	0%	0~15%	25~50%	TBD	0%	0%
상호 관세 / 협상 현황	15%	협상 타결	15%	협상 타결	47%	협상 진행중	20%	협상 진행중

#### 반도체 (한국 vs 대만) ☁

대만은 현행 0% 관세가 유지된 상황에서 최종 관세율을 협상 중에 있으며,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최종 관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번 협의에서 한국은 "주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결정되어,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 방산·조선 (한국 vs 중국) ☀

대미투자로 인해 미국이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내 수주·협력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을 공개 승인했다. 중국은 여전히 제재 및 수출통제 리스크로 인해 규제환경 하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자동차 (한국 vs 일본) ☁

트럼프 정부 이전 관세 대비 금번 협상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경쟁국인 일본 대비 하락하였다. 과거 일본 대비 2% 수준의 우위를 점했던 관세로 인한 제품 가격 경쟁력은 이제 양국 동등하게 15% 관세를 적용 받으며 사라지게 되었다. 다만, '25.4월부터 적용받았던 25% 고관세 리스크는 해소되었다.

#### 바이오 (한국 vs 중국) ☁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있는 제네릭(복제약)의 경우 무관세 유지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여전히 관세 논의 단계에 머무는 상황 대비 안정된 수출 여건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1.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타결 전망 2. 미국에 정식 수출(통관)시 15% 관세 부과되나, 통관 없이 입항(포트콜) 시 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0% 적용 3. 최혜국 대우 4. 승용차 기준 2.5%이나 반올림해서 3%로 기재, 라이트트럭은 25%



## 4. 국내 산업별 시사점

### 1) 반도체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에 놓여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 관세가 공식 무역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양국 간 세부 협상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관세 급등 가능성은 한층 낮아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 및 투자 계획의 안정성이 일정 부분 제고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sup>1</sup>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반도체 및 파생제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착수해 한국 대상 세부 관세율과 가이드라인의 확정은 시간 문제로 전망된다. 향후 미국 정책 변화나 추가 협상에 따라 시장 환경이 변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중요한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실시간 정보 수집과 리스크 시나리오별 경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한미 산업·기술 협력 강화, 미국 현지 투자 확대, AI 기반 고부가가치 공정 중심의 R&D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대미 협력 전략을 고도화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 2) 자동차 및 부품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은 관세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바이든 행정부 시절 0% 수준의 무관세 체제와 비교하면 비용 부담이 존재한다. 다만, 이번 협정을 통해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되며, 일본·EU 등 주요 경쟁국이 동등한 경쟁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급격한 수익성 악화 위험에서는 벗어났으나, 이전보다 낮은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방어에 추가적인 비용 및 전략 조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또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브레이크·샤시·타이어 등 핵심 부품 기업 역시 시장 점유율 방어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자동차산업이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며, 공급망 회복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기업들은 관세 인하에 따른 시장환경 개선 효과를 활용해 현지화 전략, 친환경차 및 전기차 사업 확대, 미국 내 생산 인프라 강화 등 중장기 사업방향 고도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4. 국내 산업별 시사점

### 3) 바이오·제약

한미 관세협상으로 한국산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관세 15%)에 포함되었고, 그중 제네릭 의약품은 기존 FTA 기준 무관세가 유지되는 결과가 나왔다. 바이오시밀러 등 일부 품목은 무관세나 최혜국 대우 적용이 불확실하지만, 우려되었던 100% 고율 관세 위험이 해소되어 업계의 부담이 경감된 상황이다.

이번 협상 이전부터 대미 수출 비중이 큰 국내 제약·바이오 주요 기업들은 이미 관세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현지 생산거점을 미리 확보하며 사업 전략을 선제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미국 푸에르토리코에 생산 시설을 마련하였으며, 셀트리온은 일라이릴리의 미국 뉴저지 생산공장을 인수하여 장기 관세 리스크 해소와 향후 시설 증설 기반 마련 효과를 동시에 추진했다.<sup>1</sup>

이번 관세 인하 조치는 선제적 현지 생산·공급망 전략을 실행하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단기적으로는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하나, 이미 전략적 대응을 마친 기업들에게는 관세 부담 완화와 함께 미국 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 확장과 투자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여유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바이오·제약 산업은 이번 협상으로 최대 관세 리스크를 피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기반을 마련했으나, 시장 전략과 정책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및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4) 방산·조선

소위 MASGA 프로젝트로 알려진, 한미 간 조선업 협력 관련 1,500억 달러 대미 투자로 향후 미국 조선산업의 재부흥은 국내 조선 기업 주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국내 조선 기업이 미국 내 선박 건조, MRO 등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 상선 & 군함 시장에서 대체불가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미국의 ‘중장기 군함 건조 계획 2025’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미국 전투함 조달 규모는 연 평균 50조원 수준으로 글로벌 최대 규모의 시장이다. 국내 조선업계는 미국 조선 산업 확장 정책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 조선 3사는 최근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HD현대그룹은 군함 관련하여 미국 헌팅턴 잉걸스社와 MOU를 체결하고, 미 해군의 차세대 군수지원함 설계 및 건조 사업에 공동 참여한다. 또한, 미국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社와 2028년까지 LNG-DF 컨테이너선 공동 건조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sup>2</sup>

한화그룹은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에 이어, 핵추진 잠수함 시장 진입과 관련된 오스탈社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sup>3</sup> 만약 인수에 성공한다면, 미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밸류체인에 직접 참여하는 최초의 국내 기업이 될 것이다. 향후 미 해군과의 협력 확대 또한 예상된다.

1. SK바이오팜: 2025년 6월 생산 시설 마련, 셀트리온: 2025년 9월 생산공장 인수 2. 조선일보 3. 비즈니스포스트



## 4. 국내 산업별 시사점

삼성중공업의 경우, 미국 비거마린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비전투함 계열의 군함 MRO 사업 협력을 필두로 향후 다양한 선박에 대한 건조 사업까지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sup>1</sup> 그동안 군함 관련 포트폴리오가 약하다는 선입견이 이번 협력을 계기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번 한미 협상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하여 미국 측에 승인을 받아, 한화그룹이 보유한 미국 필리조션소에서 건조할 수 있게 되었다.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핵추진잠수함 확보로 국내 방산·조선 사업은 한 단계 더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 5) 철강

금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현재 50%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부터 철강 관세에 대한 해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으나 결국 이번 협상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장 수출 의존도가 전체 수출량의 15% 수준<sup>2</sup>으로 높은 국내 철강업계는 당분간 수출 물량 감소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비단, 국내 철강사뿐 아니라, 냉장고 등 철강 파생상품에까지 고율 관세가 확대 적용되면서 수출 전반에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 산업의 주요 경쟁국들도 동일하게 50% 관세를 부담<sup>3</sup>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국내 철강업체들이 불리하지는 않지만, 가격 경쟁력과 협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보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자동차 및 부품산업에 대한 관세 인하가 합의되어, 철강 원재료를 공급하는 국내 철강사들도 자동차 부문 회복 기대감을 매개로 간접 수혜를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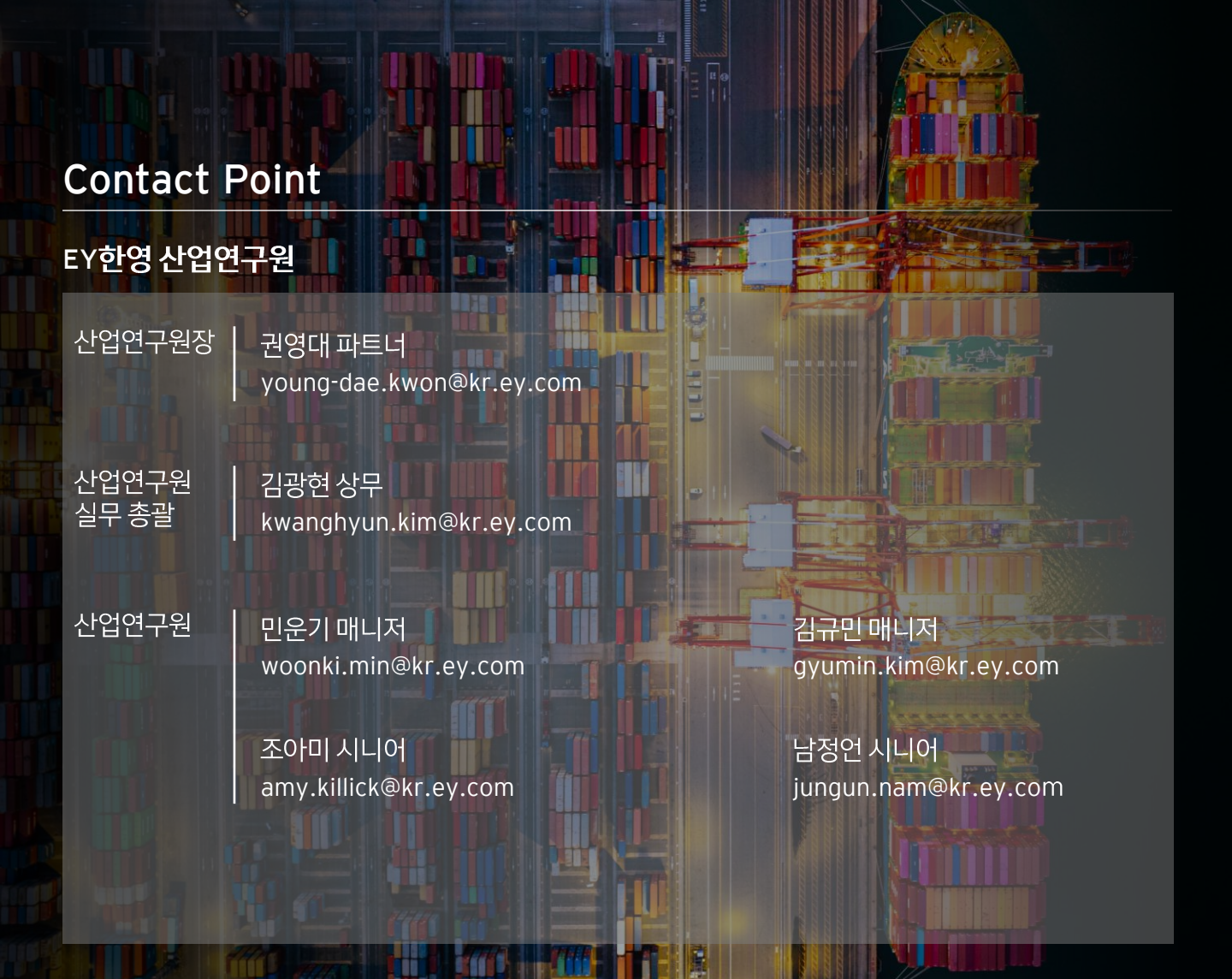
## 맺음말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그간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일부 산업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못하였으며, 향후 후속 조치와 보완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상 결과가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울러, 주요 교역국과의 추가 협상이 예정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통상 마찰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불확실성과 유동성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야한다. 시장과 지정학적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사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복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 Contact Point

## EY한영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장 | 권영대 파트너  
young-dae.kwon@kr.ey.com

산업연구원  
실무 총괄 | 김광현 상무  
kwanghyun.kim@kr.ey.com

산업연구원 | 민운기 매니저  
woonki.min@kr.ey.com

조아미 시니어  
amy.killick@kr.ey.com

김규민 매니저  
gyumin.kim@kr.ey.com

남정언 시니어  
jungun.nam@kr.ey.com

### EY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EY is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by creating new value for clients, people, society and the planet, while building trust in capital markets.

Enabled by data, AI and advanced technology, EY teams help client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and develop answers for the most pressing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EY teams work across a full spectrum of services in assurance, consulting, tax, strategy and transactions. Fueled by sector insights, a globally connected, multidisciplinary network and diverse ecosystem partners, EY teams can provide service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All in to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formation about how EY collects and uses personal data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individuals have under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re available via [ey.com/privacy](https://ey.com/privacy). EY member firms do not practice law where prohibited by local law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https://ey.com).

© 2025 Ernst & Young Han Young

All Rights Reserved.

APAC No. 05001271

ED None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legal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https://ey.com/kr)